

# 대전디자인진흥원-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 맞손

8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6.01.23 10:50

## 대전·충남 디자인 공동세미나 성료



22일 '대전·충남 디자인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충남연구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양 지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충남연구원은 지난 22일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디자인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을 대비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모델 등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주연 홍익대학교 교수(서울시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최근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효율적인가보다 얼마나 환대받는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결합 사례를 보면, 디자인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행정통합 이후 대전·충남이 직면할 광역 이동·생활권 확장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오병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은 "센터는 공공디자인 선행연구, 생활 SOC 연계 디자인, 주민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왔으며, 이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디자인 기준과 지역 맞춤형 실행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 실험과 확산을 잇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현 대전디자인진흥원 지역성장실장은 “진흥원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디자인 리빙랩, 로컬브랜딩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며 “공공디자인은 미관 사업이 아니라 투자 대비 효과가 측정되는 정책 수단인 만큼, 향후 대전·충남 통합 디자인 정책에서도 성과지표와 데이터 기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민규 명지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김용각 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재령 목원대학교 교수, 이현성 홍익대학교 부교수, 장지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실장, 채완석 (주)투엔티플러스 부대표가 토론으로 참석해 광역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공동 연구·사업 발굴,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공공디자인을 통해 광역 정책을 시민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대전·충남이 공동 실행이 가능한 공공디자인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